

대기업 계열사 간 채무보증 감소... '꼼수 빚보증' 증가 우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공정위, 채무보증 전년비 3.7% ↓
TRS 거래액 6조, '약용사례' 감시
의결권적법 행사여부도 검토중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 대기업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채무 보증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규모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채무보증 대신 '꼼수 빚보증'이 증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를 공개했다.

◆ '채무보증 회피 우려' TRS 거래 4년 여간 3.5조원

올해 5월1일 기준 조사에서는 47개 상출집단 중 10개 집단에서 1조115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대비 3.7% 감소했다.

이 중 제한 대상 채무보증액은 9641억원으로 전년 대비 1260억원(-11.6%) 감소했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지정된 집단에서 4301억원을 해소했으

나, 올해 새로 대기업으로 지정된 집단에서 3041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업별로 호반건설(3193억원), SM(2731억원), 셀트리온(676억원) 등이 연속 지정 집단이며 내년 1분기까지 해당 채무보증을 전부 해소할 계획이다. 신규 지정 집단에는 이랜드(863억원), 중흥건설(806억원), 세아(696억원), 태영(592억원), 한국타이어(83억원)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채무보증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TRS, 자금보증약정에 대한 서면 실태 조사를 올해 처음 실시했

다. 조사 결과 TRS는 상출집단 10곳(소속회사 18개)에서 총 54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액수로 보면 6조107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상출집단 소속 계열사 간 거래액은 3조5333억원으로 대부분 공시됐다.

TRS는 거래 당사자가 주식, 채권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다. 예를 들어 부실 계열사가 발생한 사채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우량 계열사가 보상하는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다.

자금보증약정의 경우 상출집단 10

곳(소속회사 100개)에서 1147건의 거래가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상출집단 소속 건설사와 비계열사 간 체결한 사례가 738건(64.3%)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정위는 채무보증이 감소한 대신 TRS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연결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약용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감시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설계되는 TRS 거래 특성 상 세부적인 계약내용과 수익구조 등 사안별로 채무보증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지 여부를 향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기업 금융사 의결권 행사 24건 위법 여부 조사 중

공정위는 이날 12개 상출집단 소속 33개 금융·보험사와 해당 기업이 출자한 42개 비금융·보험사를 대상으로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도 공개했는데, 6개 상출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7개 비금융 계열사 주주총회에서 총 89회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공정거래법 예외조항에 따

른 의결권 행사는 41회, 자본시장법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의결권 제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은 건은 24회였다. 공정위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24건을 중심으로 의결권 적법 행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사 기간에서 계열사 간 합병·영업양도 승인 관련 주종 안건은 3건 존재했는데,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예외적 의결권 행사 사유에서 '계열사 간 합병 및 영업 양도'가 제외된 바 있다. 다만 이번에 조사된 3건은 모두 개정법 시행 이전에 상정된 안건이다.

구체적으로 지엔엠홀딩스는 농협법상 특례에 따라 지엔엠퍼포먼스의 합병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한 반면, KT인베스트먼트, 엠엔큐투자파트너스 등 2개사는 개정법 취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민 과장은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들은 대체로 의결권 제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北 미사일 도발 맞대응... 합참, NLL 이북에 공대지미사일 사격

북한, 울릉도 포함 남쪽에 첫 발사
한미연합 '비질런트 스톰' 겨냥한 듯
尹 대통령 '신속 엄정대응' 지시에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에 정밀사격



북한이 2일 오전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도발을 감행했다. 합참참모본부(합참)는 북한이 이날 오전 8시 51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 3발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 중 1발은 속초 동방 57km, 울릉도 서북방 167km 수역,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26km 공해상에 떨어졌다.

해당 미사일은 울릉도 쪽으로 향하다가 공해상에 탄착했다. 이에 오전 8시 55분에 울릉군 지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됐고 오후 2시에 경계 경보로 하향했다. 갑작스레 공습경보가 발령되자 울릉주민은 크게 동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5면>

북한은 올해에만 총 29번째 미사일 도발을 했지만, 울릉도가 포함된 남쪽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으로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달 31일부터 시작한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정현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한미가 북한을 겨냥해 무력을 사용할 경우 "꼼짝한 대

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군 당국의 보고를 받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하라"고 지시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NLL 이북 공해상으로 공대지미사일

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와 적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하는 바"라고 밝혔다.

여야는 일제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규탄 논평을 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우리 군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내고 "북한에 군사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한다. 북한이 끝없는 고립의 길로 걸어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면, 군사 도발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고환율·석유감산 등 물가 상방리스크 혼재"

» 1면 '고금리시대 위기의'서 계속

이승헌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서울 중구 한은 본관 15층 회의실에서 열린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향후 물가 전망경로 상에는 국내외 경기 하방압력 증대 등에 따른 하방리스크와 고환율 지속, 주요 산유국의 감산

규모 확대 등에 따른 상방리스크가 혼재되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레고랜드 미상환 사태로 인한 채권시장의 불안에 대해 한은의 대응역할도 높아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윤우 더불어민주당

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근 자금시장과 경제 문제가 레고랜드 영향도 있지만 특정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기보다는 최근 물가가 예상치 못하게 급등하고 짧은 기간 내 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등 금리인상과 환율이 맞물려 기본적으로 불안요소가 깔린 상황에서 불안이 가속화됐다"라며 "조만간 금통위를 여는데

현시점에서 한은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한은이 물가 등 실물경제를 고려해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가겠지만 채권시장 여파로 선뜻 빅스텝을 밟을 수 없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허정인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말 한국 기준금리는 3.5%로 예상된다"라며 "내년 1분기 0.25%p 추가인상까지 고려하면 이번 인상 사이클의 최

종 금리 수준은 3.75%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결국 한은은 0.25%p 인상 속도조절과 함께 연준의 인상경로와 국내 물가경로라는 기존의 조건부 포워드가이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라며 "최종 금리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를 기존 3.50~3.75% 수준에서 관리하면서 인하에 대한 기대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